

이탈리아 무형유산 네트워크

2012년 발리에서 열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이후 이탈리아 무형유산 체계와 2003년 유네스코협약에서 언급된 공동체 참여의 가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간에 괴리가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탈리아 NGO인 '유산과 박물관 연구협회'(SIMBDEA)는 앞장서서 '이탈리아 무형유산 보호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했다. UNPLI가 지지하는 이 계획은 경험 전수와 문제점 공유, 훈련,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행위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NGO SIMBDEA는 민족지박물관을 비롯해 인류학과 사회과학 및 연구와 관련된 여러 협회를 결집시키는 데 비해 UNPLI는 6,000여 개 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지역 차원의 포괄 협의체 네트워크다. 2013년 1월에 열린 국제회의 '무형유산: 시민사회, 연구, 제도'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안토니오 아란테스, 키아라 보르톨로토, 마르크 야코브 등 무형유산 전문가와 학자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NGO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탈리아 문화관광부는 2014년에 무형유산 국가보고서 준비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 담당 기관으로 SIMBDEA를 지명했다(NGO의 도움으로 작성되는 이탈리아 정기보고서). 2014년 4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민족지박물관, 대학교, 지역진흥협회, 문화기관, 네트워크,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관련 행위자 다수의 협조로 작성되었다.

공인 기준 관련 논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모든 단계에서 NGO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 국제 차원에서는 NGO 포럼뿐만 아니라 경험 및 유산 보호 모범 사례와 육성 프로젝트, (2) 국내 차원에서는 이탈리아 정기보고서와 관련해 국내 기관과의 대화 및 협력을 토대로 NGO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 방식, (3)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관이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등으로 NGO의 참여를 도모한다.

지역 차원에서 SIMBDEA와 UNPLI는 또한 참여 성격의 목록작성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 '산도메니코 사제 및 뱀 의식 축제'가 열리는 아브루조 주의 소도시 코쿨로에서 우리는 (지역 사회와 경제 상황에 주목하면서 참여형 유산 보호 방식 형성에 도움을 주는) 뱀 의식의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는 실험 사업이자 이탈리아에서 아직까지 활용된 적이 없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gabriele.desiderio@unpli.info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통합 계획과 실행에서의 문화유산 NGO 역할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콘택트베이스 사무총장

개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과 운영지침은 NGO 역할의 중요성을 개략 서술하고 있다. 특히 협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지역·국제 차원에서 프로그램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원 투입을 위해 모범 사례와 도전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지식 제공과 법률 수립 및 역량 구축으로 공동체의 보호 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형유산 NGO가 거둔 성과는 공동체 역량 구축, 연구 및 기록화 작업, 문화 관광을 통한 유산 지역과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국경을 초월하는 창조 활동 장려, 문화 자원 구축, 관련 문화예술 기관 조직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무형유산 NGO는 2015년 이후 개발 정책 틀에 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주 의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빈곤 퇴치, 공동의 번영 추구 및 평등 실현, 교육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성 평등과 여권 신장 확대, 개발 및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국제 동반자 관계 구축, 평화롭고 포용하는 사회 구축 등 SDGs의 세부 사항 달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 또는 조력자로서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 공유, 네트워크, 중재 역할을 통해 NGO는 개발 정책 요소의 핵심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전승자의 참여가 보장된 문화 혁신 기반의 개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창조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NGO는 문화 자원 확보, 유산과 창조성, 문화 자원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성 혜택에 대한 지표 구축, 유산 관리 역량 구축 및 지원, 가치사슬 강화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서론

NGO는 시민의 권리, 이익, 요구 주장과 옹호에 효력을 발휘하는 사회자본 동원 능력 덕분에 글로벌 발전 의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NGO는 문화 중심 접근법을 바탕으로 개발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 개척에 선봉에서 서서 수행해 왔으며, 전승자들로 하여금 전통문화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NGO의 노력은 전 세계에 걸쳐 창조성 문화 자원 및 활동으로 구성된 강력하고 거대하며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영역의 구축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소외된 공동체들이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다원주의 강화와 분쟁 완화에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무형유산 NGO는 전문 분야, 이해 당사자, 목표, 지리상의 활동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NGO는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역량 강화, 보호 활동, 창의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사슬 강화, 문화의 재현 중재 등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NGO도 있다. 이 밖에 정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NGO도 있다(www.ichngoforum.org). 국제사회는 현재 문화를 '발전의 동력이자 조력자로 인정하고 문화가 사회경제 발전과 사회 결속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먼저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발 프레임에 문화를 포함시킬 근거가 되는 국제 협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규범과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아울러 변화 기능의 자원인 문화자본을 활용하여 무형유산 NGO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령으로서 수행할 역할과 활동 분야를 제시하기로 한다.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와 미래의 공평한 환경, 경제, 사회 복지를 시사한다. 문화유산, 창의 산업,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문화 인프라는 특히 무형유산 전승과 청소년을 전담해 온 여성의 수입 증대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왔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창작 상품 및 서비스 거래 규모는 미화 6,2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13).

문화관광은 흥미로운 사례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연간 관광객 수가 10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9%, 상품 및 서비스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일자리 11개 가운데 하나가 관광 부문에 속할 정도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25%가 세계 최빈국에 거주하는 빈곤선 이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청년 인력 고용률은 다른 산업의 두 배에 이른다(UNGA, 2014).

무형유산 활성화는 토착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 강화, 자긍심과 자부심 향상 등으로 사회 결속이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외된 공동체는 사회·문화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정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사회자본이 증가하고 시민의식이 강화 되면 광역의 발전이 촉진된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근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밝혔듯이 문화는 "참여를 촉진하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더욱 조화롭고 유의미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UNGA, 2014).

축제를 통한 문화 교류 및 문화 간 상호작용, 공동 예술 워크숍, 문화관광은 문화 간 대화를 통한 문화 다원주의와 사회 결속 및 평화를 증진시켜서 타자 이해를 공유하고 공감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창조 활동과 문화 및 국가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글로벌 파트너십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타자의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문화다양성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전통자원관리체계 활성화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보건 부문 강화, 에이즈 바이러스(HIV) 퇴치, 교육 수준 향상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 지도자들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UNGA: 2014).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계 수단과 사업은 또한 본바탕이 지식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데다 자원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친 환경 경제 육성에 기여한다. 문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유 가치, 지식, 기술을 전파 등으로 평생학습 기회도 확대시킬 수 있다.

무형유산에 대한 투자는 공동체에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체성 강화, 문화 다양성, 기술 발전, 권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창조기업 육성과 새로운 자원 생성이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무형유산의 중심은 사람이다. 무형유산에 대한 투자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3대 축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달성에 무형유산 NGO 활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무형유산 » 기술 » 산업 » 자원 생성 » 공유
- 무형유산 » 정체성 강화 » 발전 정책 자체 수립 »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영향
- 무형유산 » 인정 » 사회 결속 » 자부심 » 유산에 대한 열망 » 보호
- 무형유산에 대한 투자 »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와 2015년 이후 개발의 개요

우리는 지금 각국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2015년 이후 개발 의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 발전의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그동안 발전 전략은 산업·생산에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지난 2000년 MDGs가 유엔총회 결의안(55/2)에 채택된 당시만 해도 문화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국제사회는 문화와 발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협약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2003년 '무형유산 보호 협약',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차례로 채택했다. 문화와 발전, 창조경제에 관한 보고서가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ATD)에서 마련되었다. 2010년 MDGs 정상회의 결과 보고서는 MDGs 달성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2010년 유엔총회 결의안(65/166)과 2011년 결의안(66/208)은 발전 정책과 전략에 문화를 포함시키자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발전 의제에 문화를 포함하는 추세는 유엔개발원조기구(UNDAF)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12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UNDAF가 추진하는 원조 사업 가운데 문화를 접목시킨 사업은 무려 70%에 이른다. 이는 1990년대 문화를 통한 원조사업이 30%에 불과한 것을 상기해 보면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유네스코 국제회의, 2013).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및 2013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연례각료급회의는 각각 결과 보고서를 내고 발전에 문화의 의미를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201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문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네스코 국제회의는 2015년 이후 개발 체계의 맥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의제로 문화의 역할을 조명했다. 2013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문화포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 보전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에 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국가, 지역, 국제 등 기관의 정책 범주에 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국제 문화 기관들은 2015년 이후 개발 체계를 구축할 때 문화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문화는 SDGs의 중심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

2013년 10월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IFACCA), 문화의제 21(Agenda 21 for Culture), 유럽문화행동(Culture Action Europe), 문화다양성연대국제연맹(IFCCD) 등 국제 대표 문화 기관들은 유엔의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새천년 개발 목표로서 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결의안(68/223)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당사국과 유엔기관에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설정 시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과 그 산하 기관들에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 유네스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UNDP 2013, UCLG 2013, UNGA 2013).

NGO 활동 분야

무형유산 NGO는 지역의 문화자산 관리를 위한 공동체 역량 구축, 공동체 기반 기관 설립, 공동체 사업 및 경영 기술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지금까지 NGO는 중재자로서 유산의 보호 및 표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개발 정책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유산 전승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유권이 보장된 창조경제 정책이 채택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NGO의 주요 활동으로 문화 자원 확보, 문화 자산의 활성화에 기인한 사회경제 혜택 관련 지표 구축, 정부와 공동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 다양한 기관 또는 조직들의 유산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문화 자원 상황도 구축

무형유산 보호 실천에 앞장선 공동체들은 무형유산종목 목록 작성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 왔다. 문화 자원과 개발 의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료 전산화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의 경우 현재 활동하는 예술가와 문화유산 전승자 인원수를 집계한 통계 자료도 없지만 고용률과 GDP에 대한 문화 부문의 기여도를 알려 주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인도 통계청은 예술가 또는 공예가를 별도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인도의 국가산업분류 체계 역시 예술 또는 공예 활동을 포함하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창작 기예 보유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인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극심한 빈곤과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탓에 공연 및 전승 활동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승자들의 전통유산 육성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유산과 문화 다양성의 소멸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승자를 포함한 문화 자원의 확보는 전통유산 활성화를 위한 실속 있는 계획 수립은 물론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창의력 및 공동체 자산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법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무형유산 NGO는 창의력을 육성하고, 예술가·공예가와 전통지식 보유자를 인정하며, 소수 민족이나 취약 계층 및 원주민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여건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 기반 개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여건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규제 수립에 기여해 왔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인간문화재 개념을 도입한 뒤 칙령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간문화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은 제12차 소수 민족지역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정책 권고안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민족 발전 방안을 포함시켰다(MDG-F, 2013).

불평등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아이디어와 창조 자원은 지구 곳곳에서 취할 수 있지만 해당 자원의 분배와 통제는 지구 북반구(global North)의 논리에 따른다. 한 예로 인도에서는 독립 후 문화유산 증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민속예술 또는 공예기술에 대한 지원은 제한시켰다. 2007-2012년에 시행된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은 무형유산보호협약(2003)과 문화다양성협약(2005)의 영향을 받아 인도의 문화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11차 계획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모든 형식의 예술과 문화는 동등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며, 재정 지원을 비롯한 기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공연 예술의 증진과 보급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에 지원되는 자금의 흐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자원과 언론의 관심을 두고 고전예술 작품과 대항할 힘이 없는 사라져 가는 민속예술 작품 및 공예품에 자금 지원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lanningcommission.nic.in).”

각국의 지원 정책과 제도, 법 규제 시행 현황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UNCTAD가 발간한 창조경제보고서는 국가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일관된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한 국가
- 소비 중심의 ‘창조경제 산업 모델’을 추구하는 국가
- 창의 산업의 범위를 인정하지만 특정 부문에 중심을 두거나 한정하여 기본 체계를 마련한 국가
- 인식은 하고 있으나 문화 부문 특성상 창의 산업의 범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
- 창의 산업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UNDP, 2013)

관리 구조의 취약성은 제도 접근에 또 다른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계획된 관리는 중소기업에 제공될 것이다. 후자는 또한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노력에 막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식과 경험의 연결망 구축 및 공유

개발에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증거 기반의 분석 결핍과 종합된 통계 부재는 이러한 체계 구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형유산 NGO로 이루어진 지식 공동체의 구축은 축적된 다양한 경험 공유, 모범 사례와 방법 전파,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 전략과 행동 모색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현재 체계화한 정보 공유를

위한 초석 부재로 당사자들이 관련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식 관리는 명확한 지침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에 적잖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발전을 통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생성하여 현실과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효과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역량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MDG-F: 2013).

무형유산 NGO 공동체는 영향 평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발굴과 함께 확실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술 단체, 기관, 문화유산의 관리 강화

유산 관리를 위한 연구와 역량 강화는 무형유산 NGO가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라 할 수 있다. 관련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 부문과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무형유산 NGO는 이미 문화자원을 관리하고 창의 기업을 육성하는 예술가·공동체 기반의 조직 설립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연구·학술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무형유산 NGO는 학제 간 연구와 유능한 관리자 및 기관 육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무형유산 NGO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제로서 문화생활 참여 확장을 통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UCLG, 2013). 문화는 그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미숙련자' 또는 '고용에 기술이 부족한 자'로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을 창조경제의 일원으로 되도록 변화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는 미시경제 차원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형유산 NGO는 지식, 경험, 자원,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바탕으로 문화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두 다루는 실천 기반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NGO의 이러한 노력은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에 효과를 미치는 주춧돌 구축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NGO 역량 강화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 무형유산 보호 관련 NGO 참여 배경

유네스코는 2003년 협약에서 국가·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보호 노력을 더욱 적극 전개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즉 협약 본문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 파악과 규정에서 NGO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인가를 받은 NGO(인가NGO)가 국제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지원과 조언, 무형유산 정보 수집 등 지원의 수행 방법에 관한 구상안을 제시했다.² 이러한 운영지침의 방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규정 과

1 협약 본문 11조: 모든 당사국은 (b)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보호 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다양성 요소를 공동체, 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 하에 확인하고 규정한다. 제11조 b항에서 명시한 NGO의 역할은 운영지침 III2장, 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운영지침 III.2장 96조: 협약 제9.1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가받은 비정부기구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고 참고를 위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b) 협약 제18조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c) 국제원조 요청 (d)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유산 보호 계획의 효과. 운영지침 123조 b항: 위원회의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공동체, 단체, 시민사회, 비정부기관, 전문 센터, 연구소,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관심이 있는 기타 기관들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